

제418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2일(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남북협력기금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1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1
가. 남북협력기금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한 심사와 동일하게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통일부 소관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남북협력기금

(10시11분)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통일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수경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대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고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감액 의견 7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번,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단 사무실 설치비 등을 편성하여 연례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단 출범 시 예비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불용의 최소화를 위해 전액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학교 통일교육 강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가운데 내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증액 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출이 없었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상태인바, 9개에서 12개 대학으로 지정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증액분인 7억 4000만 원에 대하여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번,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는 통일부가 기수행하고 있는 국내통일 기반 조성,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과 중복되므로 해당 예산 전액인 7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번·5번·6번·7번은 기본경비에 대한 감액 의견입니다.

먼저 4번은 통일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업무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임에도 이들 업무는 하지 않고 북한인권 업무만 하고 있어 관서업무추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통일정책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20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인권인도실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인권인도실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게 실정법 위반을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된바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76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7번입니다.

통일협력국 기본경비에 대하여서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등 7400만 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수경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북한인권재단이 만약에 출범을 하게 되면 2개월 동안 재단 사무실 임차료나 설치 공사비 등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비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시지만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또 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재단 이사 추천이 되면 즉시 출범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기존의 안대로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 통일교육 강화, 선도대학 지정 관련해서는 이것도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대학을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12개 학교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해 보면, 선도대학 대학생과 선도대학이 아닌 곳의 대학생의 통일 관련 인식을 조사해 볼 때 선도대학의 학생들이 훨씬 더 통일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선도대학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교대를 2개교를 신규로 선정하고 기존 사업종료 대학 중에서 우수 대학 1개 그리고 나머지 1개, 이렇게 4개를 늘리고 싶은데요. 특히 교대는 교사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통일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30세대 통일교육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실·국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냐고 지적을 주셨지만 다른 국 사업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 국내통일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책 홍보가 목적이고 북한인권 공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사업이라서 2030세대만을 따로 특별하게 관리하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저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아울러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사업이라는 점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처음 관서업무추진비 보면 지금 통일부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통일·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고 남북관계 관리도 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인권 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만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기관 운영 및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통일정책실도 마찬가지로 좀 전의 설명과 동일하며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북한인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 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인권법상으로도 통일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도 통일부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관련하여서는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내외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나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역시도 기존의 안대로 확보되어야만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재정 위원 차관님,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이 통일부의 현재 업무의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은 통일부가 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거여서 저는 축소하거나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 오히려 통일기반 조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차관님 생각에는 북한, 지금 2030도 교육하고 통일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2030한테 지금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통일을 하고 싶게 만들겠어요, 아니면 통일 진절머리 난다 싶게 만들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차관님, 통일부 업무 중에 북한인권이 차지하는 것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듣고 싶어요. 예산을 쓰는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생각하는지 저희가 가늠은 되지만 듣고 싶습니다.

차관님, 통일부 업무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의 업무라고 생각하나요? 수치화시키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포선화시켜서 얘기한다면.

○통일부차관 김수경 수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중요도를 따지면, 여러 가지 업무 가운데.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에서 하는 업무들은 다 중요하고 그중에 북한인권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위원 저희가 결산을 했잖아요. 결산을 하고 보면 통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모조리 북한인권과 관련된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북에 대한 혐오감을 통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혐오감을 기반으로 한 정말 무력을 통한 힘의 우위에 의한 통일이거나 또는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깔게끔 만드는 방식이에요. 북한인권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통일부 소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업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데서 하는 게 맞다, 통일부가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오로지 이렇게 몰입하면서 통일부 관련한 통일이라는 이름만 허울 좋게 붙여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결산에서 우리가 다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차관님 머릿속에서는 북한인권 문제가 제일 아십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북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드리기 어려운 것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혐오감이 북한인권에 가해를 가하는 북한 정권

에 대한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을 전반적으로 다 혐오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재정 위원** 통일을 혐오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나름의 방식으로 전체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스텝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이끌어 내면 모르는데 그저 적대하고 소통을 가로막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거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인권을……

○**이재정 위원** 그게 어떻게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일까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통일을 싫어하게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북한인권 혹은 북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래서 통일이 더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재정 위원** 어떤 통일이요? 어떤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주민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통일입니다.

○**이재정 위원** 어떻게?

○**통일부차관 김수경**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재정 위원**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 방식을 통하면 힘의 우위에 의해서 우리 가치의 우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여기 생략한 방식은 흡사 정말 흡수통일 또는 북한 붕괴에 의한 통일 또는 무력 전쟁을 통한 통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억하심정들만 심어 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통일기반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개별 의견을 밝히지 않았지만 근원적으로 지난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리고 국감을 통해서 보건대 그런 결과에 비추어 보면 근원적으로 맨데이트(mandate)를 줄 수가 없어요. 통일부에 과연 통일 기반한 교육 활동이나 기타 홍보 활동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행했던 국감과 결산심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저도 이재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갖고 하는 그런 것까지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 일은 통일부가 앞장서서 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부처의 설립 목적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기본인데 오히려 교류 협력을 차단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대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식되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통일부나 또는 장관님이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한 예로만 봐도 대북전단 그게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부가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유관기관에 대북전단이 살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 일도 없고 오히려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표창을 주고 또 대통령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정말로 조장하거나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통일부한테 어떻게 이 활동 예산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히 통일부가 대오각성해서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은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상현 위원 차관님, 우리가 북한인권법 북한인권재단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상현 위원 언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2016년도지요. 그러면 북한인권재단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북한인권재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여야 합의하에?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 소속입니다.

○윤상현 위원 통일부 산하에 있지요. 여야 합의로 우리가 북한인권재단을 만들기로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봄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인데, 그러면 우리가 북한인권재단 상임이사 12명, 통일부장관 추천 몫이 2명이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추천하셨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이미 추천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둘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여야한테 예를 들어서 장관님이 여당·야당 원내지휘부나 당 지도부를 쫓아가서 빨리 추천해 달라 얘기하신 적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13번 정도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13번?

○통일부차관 김수경 찾아가서도 말씀……

○윤상현 위원 찾아가서 말씀드렸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상현 위원 지난번에 헌재에서 북한인권재단 추천을 안 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불법이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왔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상현 위원 그러면 빨리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차관님께서서는 우리 북핵 문제, 빨리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우리 정부의 레버리지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북핵 문제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가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북한인권을 이야기함으로써……

○윤상현 위원 우리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연계시켜서라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안보와 인권은 강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연계되어 있지요.

차관님, 헬싱키 협정이라는 거 아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상현 위원** 1975년 유럽에서 미국 주도하에서 NATO 회원국하고 바르샤바 회원국들이 모여서 소위 말해서 안보, 경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인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인권 문제가 아예 여기에 소련도 폴란드도 체코도 인권 문제를 딱 박아서 제기를 합니다. 그게 유럽안보 협력회의, CSCE인가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결국은 소련이나 동구의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인권 문제 제기가 훨씬 더 중차대하게 역할을 했다고 유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물론 북한을 생각한다면 내재적 접근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만 어떤 서구 유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첨예한 안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도 인권 문제 제기가 헬싱키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효과가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북전단 사업, 확성기 방송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한 노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이 아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인권은 북한 정권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북한인권재단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맨날 여야 지도부한테 하는 것보다 캠페인을 전개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직접 찾아가서 읍소를 하든지 또 북한인권재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탈북민들 지금 몇 만 명 있습니까, 3만 5000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3만 4000여 명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 사람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북한인권재단이 정말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지 아닌지 한번 전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예스 오어 노’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스’는 이래서 이렇고 ‘노’는 이래서 이렇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도 지도부에도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북한에 대해서 느끼는 인권재단의 필요성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실행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재단 출범을 위해서 좀 더 창의적인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1페이지의 첫 번째 것, 북한인권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부터 전액이 불용되고 있어요, 여덟 번째로. 그리고 4억 7500만 원은 다섯 번째, 5년째 불용이 되고 있어요. 이사 선임에 대한 정치적 문제는 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지적을 했고 그런데 예산 문제로 보면 이게 여덟 번째 계속 전액 불용이 되니까 솔직히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재외동포청도 그렇고 우주항공청도 그렇고 신설할 때 예비비로 해서 청을 개칭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로 편성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이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억 7500만 원이 적은 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모은 돈이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니까 이것은 삭감해야 된다는 게 내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위원님이나 한정애 위원님이나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어떤 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저도……

○한정애 위원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삭감 의견 올리신 것 다 포함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지점인지는 제가 알겠는데 관련해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면 좋겠어요.

아까 통일부는 대화나 교류협력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의 정부부터 시작해서 통일부가 하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가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북한의 변화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썼던 가장 큰 표현이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고 교류협력도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지 교류협력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교류협력을 한 이유가 크게 좋게는 민족 동질성 회복이라고 썼지만 동질성이 어떤 쪽으로 오느냐 하는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이 변화해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통일부의 기본 임무다. 그걸 마치 통일부가 하지 않을 일을 하는…… 그러니까 방법과 목표가 이렇게 있고,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교류협력이나 대화는 수단이고 절차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지요. 당연히 평화 그다음 남북관계 개선,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북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는 사회가 돼야만 진정한 평화고 개선이고 통일이 오는 거지 그 체제가 지금처럼 저렇게 있는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든 남북 간의 개선을 위해서든 통일을 위해서든 북한의 긍정적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변화 중의 핵심이 민주적 통제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건 통일부의 기본 임무라는 걸 저는 다시 다들 리마인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가 너무 편중돼 있다라든가 이건 좀 지나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일부 좀 조정을 하든가 방식을 바꾸든가 하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상 통일부는 이런 일 하면 안 된다라든가 그게 주된 일이 아니다, 북한 변화를 위해서 왜 통일부가 일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난센스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인권재단이 8년째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올리냐 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울고법에서 분명히 위법 판결이 났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5명을 국회의장은 통보해야 되고 7명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즉시 출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의 주 내용이잖아요. 판

결이 났으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전제에서 예산을 해 주셔야지 판결은 관계없이 무조건 올해 내에는 안 될 거다, 내년에 되겠냐? 이것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도 택도없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그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적어도 이전과는 지금 상황이 달라져 있다, 인권재단 이사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과거에 이랬다는 거고 올해 내년 예산까지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논의는 부처 전체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기웅 위원님의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이 통일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의견입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전체적인 일을 지적하시는 거라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따로 있고 외교부가 따로 있습니다. 외교부가 국방부가 해야 될 언어를 사용하면 그건 자기 할 일 안 하는 거지요. 통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북한 행동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우리는 조직해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군사적 준비태세를 충분히 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것도 한 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북한 정부를 혐오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 혐오스러운 정부를 협상 테이블 앞에다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통일부의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외교나 북한의 상황들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여당의 태영호 전 의원님,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계시는 태영호 전 의원님도 의원일 당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북한 정부를 그렇게 몰아붙여 가지고 어떻게 통일부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각각의 기능에 마땅한 역할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북한인권재단을 출범 시키고 인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만 이것은 여야가 바뀌어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 온 것들이 뭐냐면 북한이탈주민의 관리 문제는 행안부로 넘기고, 다시 이야기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십자가 밟기를 시킨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편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일부가 그들의 관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상을 가지고 협상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분리하자라는 의견 계속 주셨습니다. 그건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꾸준히 나왔던 문제 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증거를 축적하는 측면도 있고 향후 여러 가지에 대한 국제사회에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통일부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 검찰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기록물 보관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차라리 이 역할을 주는 게 맞다라는 근원적인 문제 제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의 기능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있어 왔고 김기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북한과의 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협상 또는 우리가 그 행동을 견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각 부처에서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법에 따라서 재단이 빨리 설립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상황이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2023년 6월 달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한 경험 그 다음에 올해 5월 달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한 경험에 따르면 사무실 임차료나 사무환경 조성, 시설 공사비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고 국회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열린 토론들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인권의 가치에 대해서 쉽게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김기웅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남북한 사회가 교류협력도 일종의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수단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가 점점들이 늘어나고 특히 남북한 사회 점점이라기보다 북한은 외부랑 굉장히 고립돼 있으니까 북한 사회가 외부랑 어떤 점점들이 늘어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북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민주화된 흐름들로 나갈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도 조금 염려가 되는 것 한 가지는 인권이라는 것들, 저는 유럽에서 인권과 인도적 위기를 같이 연구하고 활동들을 해 왔었는데, 인권이란 담론의 힘은 보편성에 있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인권 혹은 굉장히 특정한 정치적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인권은 쉽게 공격받고 인권담론이 가진 힘이 굉장히 쉽게 무력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권이 최종 목적이거나 최종적인 가치가 돼야지 이게 수단화돼 버리면 또 굉장히 인권담론이 가진 힘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사실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는 남북한 특수관계 안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과 혹은 인권의 보편적인 점들은 동시에 가지면서 국제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통일부의 역할들이나 통일부에서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통일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통일부에서 가진 어떤 역량들, 커 온 역량들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는 남북한 특수관계 안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안 한다는 한반도라는 이 안에서 얘기를 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습니다. 통일부에 인권 관련 전문인력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국가인권위보다 훨씬 많은 인력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제회의나 아니면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넓혀 나가기 위한 노력은 사실 어제 소위에서도 얘기가 좀 됐듯이 외교부가 그 역할을 맡고자 합니다. 그런 역할이 통일부와 외교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부분들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외교부가 가진 역량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외교부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사실 전 세계의 다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인권 관련 리포트들을 동시에 내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가 조금 심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의 다양한 인권이란 보편성을

가지고 다양한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부가, 고유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다른 부처들의 전문성들을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인권 문제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국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었는데 소비에트 전환 과정에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근거를 좀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인권은 중요하니까 보편성을 강조하고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기능을 해야지 인권 문제가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일부가 아닌 국내 다른 부처에서 이 문제를 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배 잠깐만요. 전체적인 말씀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전체적 얘기는 조금 더 콤팩트하게 하고요. 구체적인 말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필요도 있는데, 일단 아까 인권재단 문제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항목에서 특히 기관운영경비 관련된 부분도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뭐 조금 더……

○한정애 위원 북한인권법 말씀 많이 하셔서, 2016년에 통과시킬 때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내용인데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인권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실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북한 내 인도적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도 하라고 하는 게 북한인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인권 탄압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겠지만, 그런 실태조사 인권보고서도 만들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굶주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인도적 지원 수요가 갈급하고 긴급한지에 대한 수요조사·연구의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다양하게 개발하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아니라면 지원하는 것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한번 좀 알고 싶어요.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도적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도 굉장히 많이 편성해 놓고 있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지원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전혀 받지 않고 있고 국제사회의 지원 제안조차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도적 지원 부분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용인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대북전단……

○**한정애 위원** 힘드니까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보고 인도적 지원 수요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코로나를 당했었고 그 이후의 상황이 취약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에 대해 조사·연구를 한 번이라도 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이런 것이 진짜 긴급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는 뭐 못 받은 것 같은데? 인권실태보고서만 계속 갖고 왔지요. 그것도 육하원칙에서 벗어나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적어 가지고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해 가지고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보내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기금 편성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모성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기금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 지원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와 북한이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언제는 제약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인권법 만들 때도 제약이 존재했었고요. 제약이 있고 늘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건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북한인권만 계속 외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통일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북한인권을 중심적인 사업으로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북한인권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는 조금 저희로서는…… 다른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통일교육이라든가 정책 수립 같은 업무들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2페이지의 두 번째에 선도대학 사업이 있어요. 통일교육 선도대학이 지금 몇 개가 지정돼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8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9개가 있어요, 9개.

○**통일부차관 김수경** 8개로 저는……

○**윤후덕 위원** 9개예요, 9개.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8개입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8개가 맞는 것으로 저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9개에서 하나가 줄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하나 줄었네요, 8개네.

지금 몇 개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네 군데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1.8억씩 네 군데니까요 7.2억이 들어가고 거기에 통합……

○**윤후덕 위원** 한 대학에 1억 8000만 원씩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후덕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이거는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할 수 없는 거를 민간에 이렇게 지원하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있어요? 어느 대학은 몇 %를 내요? 10%나 20% 이렇게 자부담하지 않아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자부담은 이제 선정할 때 우대조건에는 들어갑니다마는 의무는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의무는 아니지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대학한테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선도대학이 돼요. 전국에 대학이 몇 개나 돼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이 사업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데 183개가 4년제 대학입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민간에 경상보조금을 주는데 이거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지요. 1억 80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꼭 자부담을 매칭해서 하세요.

내 얘기가 맞지요? 자부담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후덕 위원** 이게 자료 보니까 대체로 1월 달이나 2월 달에 선정하더라고요. 준비는 다 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자부담을 정확하게 10%나 20% 그거를 좀 매칭을 하세요. 아니면 이런 식의 민간보조는 수도 없이 예산이 나가요. 다 돈 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성과평가를 해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4년 지원하는데 크게는 2년 차 되면 중간평가를 하고 4년 차에 또 최종평가를 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이 성과평가한 자료를 오전 중에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내년 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최소한 20% 정도 매칭하는 거를 강행규정으로 하세요. 아니면 4개 대학에 거저 주지 말고 여기서 삭감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런데 여기 지적을 보면 ‘구체적 근거자료 제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왜 근거자료 제출이 안 돼 있나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저희가 어제 의원실에 미리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드릴 때는 다른 대학사업하고 좀 혼동된 측면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셨다 그 말씀인가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그리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평가자료 같은 것도 어제 요구해서 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저한테 달라고요, 저한테.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윤후덕 위원** 지금 여기 김준형 위원이 이렇게 삭감하는 걸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 거에 대해서는 4개 대학은 전액 삭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물어봅시다.

○**소위원장 김영배** 예, 말씀하시지요.

○**김태호 위원** 대학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자부담을 몇 % 하라고 하면 할 대학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의무 조건은 아니고 선정을 할 때 우대 조건에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통일교육 관련해서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스스로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신청한 대학이 있었습니까?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이 사업을 신청하는 대학들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있는데, 그동안 자부담 요구에 대해서 통일부 차원의 어떤 이야기는, 제시지는 없었습니까?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저희들이 이제 우대 조건이라고 할 때 일부 대학은 자부담이 약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은 그런 재정 여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재정 여건이 안 된 대학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자부담을 하라고 그럴 경우에는 더 어렵다, 교육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아무래도 강행규정으로 한다면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존경하는 한정에 위원님께서 기본경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을 제안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남북대화·교류·협력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측의 책임? 제가 봤을 때 우리 측의 책임보다는 사실은 북한 정부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황은 하시라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경비라는 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비니까 이 기본경비는 그래도 존치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저도 한두 개만 더, 아까 그 선도대학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역별로 배분이 있지요. 쿼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도권하고 지방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지역분배하고 직능, 교대 같은 데 분배하는 게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의 큰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대학은 재정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윤후덕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니고 매칭을 할 수 있으면 매칭 검토하는 게 맞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서울의 일부 대학들 말고는 지방대학 대학재정이 많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돈 내서, 일부 부담해서 통일교육 하겠다고 할 가능성이 작다 보니 매칭을 찾되 서울지역에 한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우대하는 조건에서 뭔가 잘 만들어 보면 그 방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아이디어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구별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건 위원님이 기본경비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거지만 지금 북한이 두 코리아, 2개의 국가 얘기하고 혹은 통일 지우기 하고 우리 국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부에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된다.

여기서도 같이 ‘통일부 너 하는 일 없지 않냐’고 예산 깎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런 정무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통일부에 힘을 좀 실어 주시라, 지금 안 그래도 힘이 좀 필요한 곳이니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홍기원 위원** 차관님, 지난번에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들 여기 와서 청문회 했잖아요. 그때 그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는 한이 있어도, 처벌받더라도 전단 날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말씀하시지요.

○**홍기원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정확히 그렇게 말을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게 얘기 했어요. 법 위반이라도 하겠다, 자기가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법을 지키도록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님이 그날 다 증명이 됐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날 아마 박상학 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기원 위원** 박상학 씨도 그렇고 또 그 형제도 그렇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날 통일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라고 아마 박상학 씨가 이야기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홍기원 위원** 예, 맞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 쪽 인권실장과 통화 과정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는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로서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그거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정확하게 왔다. 또 군 공역구역……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니……

○**홍기원 위원**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런 풍선 날리는 게 군 공역 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 자세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고무대 가지고 더 자극을 받아서 날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명확하게 의사표시 못 하고……

또 그날 이 자리에서 큰소리치면서 자기는 법 위반이라도 하겠다 또 목숨을 걸더라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통일부가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면서 무슨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인권인도실

그런 기본업무도 안 하면서 어떻게 통일부가 통일에 관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통화 과정에서 박상학 씨가 자기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당연히 ‘아, 이 위반사실을 알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홍기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공안전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법들도 위반이라고 국회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지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공유수면법 같은 경우도 제가……

○**홍기원 위원** 지금도 법을 위반하더라도 날리겠다고 하는데 통일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에서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 마라, 자제해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홍기원 위원** 통일부에서 경찰청 또는 군에 그런 행위가 법 위반이니까 엄중하게 단속해 달라 그런 요구 못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저희로서도 좀 더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정부기관이 어떤 행위가 법 위반인지 뻔히 하는데 수사 중이라고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할 소리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홍기원 위원**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법 위반인 것을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는 현재 이 남북 긴장관계 조성에 가장 기본적인 행위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게 통일부가 해야 될 일 아니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서 위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홍기원 위원** 아니, 당사자가 나와서 고무풍선에 10kg 이상의 물건을 매달아서 보냈다고 본인 입으로 명백하게 다 자백을 했고 또 그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을 국토부나 또는 군이나 그런 데서 명확하게 밝혔는데 지금도 여전히 수사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통일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보다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근황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홍기원 위원** 그게 적극적인 조치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경찰에 또는 군에 그런 일이 법에 위반되고 남북 긴장관계 조성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제재해 달라, 단속해 달라 그런 얘기 못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일견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

도하다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홍기원 위원** 현재의 판단은 남북관계발전법 가지고 그렇게 과도하게 단속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현재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들이 열심히 찾아 가지고 그게 항공안전법, 국제민간항공협약 그리고 군 공역 내 금지 거기에 다 위반된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부가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인정 안 하잖아요.

○**소위원장 김영배** 자……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인권인도실 실장님!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윤후덕 위원**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에 대표자라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박상학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인권인도실의 실장님 방으로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지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부에 직접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따로 만난 사례가 주로 보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인데도 인권인도실의 실장이 우리 사무실로 와라, 와서 간담회 좀 하자 그랬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통일부 주변의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기서나 만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이 맞아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단 단체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얘기하고.

그러면 박상학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통일부에 와서 간담회를 하고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제가 직접적으로 인권인도실에서 한 적은 지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차관께서 얘기하듯이 통화나 간신히 하는 모양이네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통일부의 실장님 방으로 좀 오라고 하고 그런 경우도 없어요? 통일부 주변에서, 카페에서 만나는 거예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식사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티타임 같은 식으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만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증액이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러지 말고 인권인도실 실장 그 방으로 좀 오라 그래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그것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제대로 좀 권위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세요. 그 사람들도 남쪽에서 선량한 국민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를 하지 않으니까 내 동네 파주에 와 가지고, 임진각에 와 가지고 그렇게 싸움질하고 그러잖아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저는 그래도 공직생활 하면서 그게 전단 단체가 됐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민원인이 됐건 꼭 그렇게 오라 가라 이런 정도는 별로 모양이 좋지

않아서 찾아가고 이런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모양이 안 좋다고요? 왜 파주 와서 임진각에서 모양이…… 진짜 싸움질 하고 있어요. 제발 파주 못 오게 지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한심하네요.

경기 파주경찰서가요 11월 7일 날—며칠 되지도 않았어요—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기억이 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박상학 씨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상임위 예산소위에 와서 그렇게…… 이것은 국정감사 때 했으면 고발감인데, 인지하고 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박상학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박상학 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상학 씨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박상학 개인을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소위 과정에서 지금 장난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경찰의 결론이……

○**소위원장 김영배** 장난쳐요!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속기록 다 남아요. 장난칩니까, 지금!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찰의 결론이 지금……

○**소위원장 김영배** 이러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가 기억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고……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여기 출석하지 마셔야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직무를 그만두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

○**소위원장 김영배** 공직자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와 가지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신 거고 변명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관을 대표해서 왔는데?

○**통일부차관 김수경** 다시 한번 죄송……

○**소위원장 김영배** 이 관련 예산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홍기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할게요.

차관님, 음주운전 하면 법 위반이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홍기원 위원** 누군가가 음주운전 해서 사고를 내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되는 또 그 외의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국민이 됐든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든 그런 사람들에 계도하고 또는 그런 것을 단속하는 기관에 그런 단속을 엄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홍기원 위원** 대북전단 날리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북전단 날리는 게 법 위반인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차관이 ‘그게 지금 수사 중이고 수사 중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게 그게 직무유기라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자꾸 헌법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남북관계발전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법 위반 사항이 많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주무부처 차관이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 가지고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얘기하고 하는 게 직무유기라는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네. 아니, 제발……

아유,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이 7번까지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찬반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증액 및 감액 의견이 있는데 전문위원이 24페이지 8번까지 일단 잘라서 보고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뒤엣것 검토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통일정책추진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개발 및 법제체계화 추진 관련하여 내내역사업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은 관련 정책연구비를 당초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2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액 의견은 정부조직법 및 통일부 소관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해 온 고유사무와 차별성이 없고 2년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 등이 없으며 그 운영 및 활동내역이 한반도 평화증진 또는 남북관계 발전 등에 반하고 있고 또한 출장 및 행사 등 해외에서의 낭비성 예산편성,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은 물론 통일 독트린 발표로 동 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하였으므로 10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업수행 실적 등 세부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7억 51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일한 내역사업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국제한반도포럼이라는 별도의 사업이 있고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국외여비로 중복 책정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국외여비 집행률도 10월 말 기준 23.3%에 불과하고 별도의 정책연구비가 편성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2억 96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동 내역사업 관련하여 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통일 담론 활성화 및 공론화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세부사업 통일정책 추진이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8·15 통일 독트린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을 하자는 내용으로 16억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내통일기반 조성의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의 통일정책 홍보 사업과 뉴미디어 소통 강화 사업은 통일부 내 다른 홍보사업과 중복되고 콘텐츠에도 차별성이 없으므로 7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하여 2030세대를 위한 청년 토론회 확대 및 전국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위해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내통일기반 조성의 내역사업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 관련하여 특히 콘텐츠 제작 사업은 그 콘텐츠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 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여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통일부의 공식 유튜브 계정인 UniTV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총 7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편향적 발언 등으로 문제가 지적된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중복성 홍보 예산인 유튜브 'K의 공식' 관련하여 6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탈북민 토크콘서트는 민주평통의 2025년도 신규사업인 북한이탈주민 공감 사업과 유사하며 강연 내용이 북한에 외부정보 유입을 강조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옹호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전액 3억 61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K의 공식'은 통일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사·중복, 통일 문제 해결에 관한

채널 정체성 부족, 당초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영상물 제작 등으로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지적되었고 탈북민 토크콘서트는 영상, 녹취 등의 필수 기록물조차 남기지 않아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5억 원 또는 3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내내역사업인 통일인식 제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5억 4800만 원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히 2030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 신설 의견인데 종전의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을 내역사업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10억 200만 원 또는 1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국제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내내역사업인 국제회의 및 통일공공외교의 국제한반도포럼 및 해외 세미나를 위한 위탁비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으나 두 사업 모두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가 전무하고 통일부의 다른 내역사업 또는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우려도 있으므로 8억 원, 6억 원 또는 4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규모 있는 국제회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는 대결적 대북정책의 합리화 논거로 활용하기 위한 실행 사업이고 이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또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전액인 3억 4000만 원 삭감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발간 보고서의 각종 수치 및 표본 오류 등이 발견되어 신규 추가 보고서 발간이 중단되었으므로 조사 재개 전 문항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비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입국자 수 감소 등 조사 대상과 범위가 줄어든 상황 등을 감안하여 1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축적과 대내외에 북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의 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안 유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남북피해자 문제 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남북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내역사업 남북자·역류자 문제 국제공감대 확산은 세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홍보 목적의 사업이고 다른 내역사업 ‘남북자대책반 국제기구·유관국 협력 사업’에서도 동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국외출장 및 전시성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2억 2900만 원 또는 1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국제공감대 확산 행사는 타국 사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우리의 남북 문제에 대해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책무 이행의 관점에서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은 외교부의 북한인권 역량 강화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 사용 및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내내역사업 중 주요국 정책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과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내용상 중복이고 외국인 대상 온라인 강의 제작,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사업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영문 웹저널과 중복되는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13억 74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의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 사용 및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9억 44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3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는 사업의 구체성 및 목적이 불분명하므로 2억 6000만 원 또는 2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북한인권 국제회의 관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당사국인 북한과 인권대화가 중요하고 국제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정책적 함의가 없으므로 전년 수준으로 1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정부의 대결적 대북정책 실천 사업이므로 1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국제회의는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해결 의지 표명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므로 정부안 유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8페이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계속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은 국립통일교육원의 북한인권 알리기 콘텐츠 제작과 유사하여 예산의 중복 사용 및 비효율이 우려되므로 6900만 원 또는 345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은 민간단체가 이미 추진한 북한인권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민관협력형 운영이 가장 현실적·합리적이라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억 원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센터 건립 예산이 삭감될 경우 토지매입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 매매계약 파기가 우려되고 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기록센터 운영은 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경우 기존 하나원 입소자 이외에 국내 입국해 사회에 진출한 탈북민과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은 고위급 탈북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것인바 다른 세부 사업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와 중복되므로 관련 예산 3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탈북민 감소 및 조사의 신뢰도 문제 등을 이유로 1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인권실태의 종합적·심층적 파악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동 세부 사업 계속입니다.

내역사업인 조사결과 활용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비공개로 발간하다가 2023년 도부터 북한인권보고서로 발간 중이고 신규 세부 사업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에도 테마보고서 발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위한 2억 14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발간된 자료를 보면 사업 목적과 달리 실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발생 시기 등을 기술하지 않거나 30여년 전 증언을 마치 최근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인 것처럼 기록하는 등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1억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2페이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의 사업 범위를 북한인권 실태조사, 정책 대안 개발로 확대하려는 계획이지만 해당 분야는 통일부가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연구기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있고 단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 외유성 출장 등 낭비성 지출 확인 등 관리 및 집행에 문제점이 드러난바 29억 6000만 원 감액, 28억 1300만 원 감액, 11억 3000만 원 감액, 6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인권 분야 민간단체 활동 지원 확대가 필요하므로 국고보조금 예산의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리고 북한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민간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사업평가 용역비 외에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위한 6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3페이지,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계속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민간통일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지원 방식도 직접 지원에서 공모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북한인권 관련 보조 사업과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단체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3페이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첫 번째로 통일정책 추진 관련해서 통일 대비 정책개발 및 법 제……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하고 연번을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하고 연번하고 그걸 좀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수경 5페이지의 통일정책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로 내역사업에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했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기재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근거할 때 내내역사업 간의 예산 전용은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을 착안하여서 저희가 수요가 많아서 지출을 많이 하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쪽으로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등등으로 해서 비핵화 정책 수립에 상당한 비중을 뒤야 되는 상황인

만큼 이 부분의 감액은 조금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사업 8000만 원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핵 문제가 지금 통일정책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수용하는 게 어디인지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전체 중에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불수용일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러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하여서는 10억 5000 감액이나 7억 5000 감액, 2억 9000 감액은 저희는 불수용하는 입장이고 정부안 유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일정책추진 네 번째 과제로 8·15 통일 독트린 융합연구 플랫폼 구축 관련하여서 16억 증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용 추진입니다.

그리고 국내통일기반 조성의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7억 원 삭감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안을 유지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다양한 위원님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안 원안 유지하자라는 위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합니다.

○조정식 위원 지금 몇 페이지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10페이지입니다.

○윤후덕 위원 몇 페이지하고 연번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건별로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돼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10페이지의 2번, 국내통일기반 조성 관련하여서 통일인식·북한이해 제고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국내통일기반 조성, 연번 2번입니다.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는 증액해 주시는 것은 저희는 감사하나 공모 방식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국제통일기반 조성.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 GKF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고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남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관련하여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은 불수용이고 증액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관련해서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인데요.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이고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여전히 연번 6번입니다.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중에서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에 관련돼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은 불수용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여전히……

○**윤후덕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17페이지 그냥 넘어갔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17페이지요?

○**윤후덕 위원** 17페이지, 연번 6번.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까 16페이지에서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17페이지는. 16·17 다 합쳐서 북한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고 정부안 유지는 수용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19페이지, 여전히 연번 6번입니다.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중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고 정부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불수용이고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21페이지, 여전히 연번 7번이고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중에서 조사결과 활용 부분입니다.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사업 같은 경우에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인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불수용하는 입장이고 정부안 유지 또는 6400만 원……

○**한정애 위원** 차관님, 발언을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어요.

불수용 입장이라는 말은 국회에서 하는 발언으로 적정하지 않아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정부안을 유지하거나 6400만 원을 증액하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3페이지의 연번 8번이고, 여전히 북한인권 및 자유민주평화통일 공론화 중에서……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 8번은 지금 보고 안 한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여기까지……

○**소위원장 김영배** 아, 여기까지였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민간단체 자유민주평화통일 활동 지원 관련해서 증액 요구를 주셨는데,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좀 간단히 정리하면, 수용하는 의견이 감액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한 건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 토의하시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그냥 통일부가 출판사를 차리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요 업무가 책 발간하는 거거든요. 그냥 통일출판사부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굉장히 궁금한데,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만 통일하기 전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서 언론이나 책이나 토크콘서트나 온갖 방식을 통해서 동독의 인권 상황을—동독의 인권 상황이 좋았던 건 아니니까요—이렇게 집요하게 손가락질을 한 기록들이 좀 있나요?

어쨌든 대화를 해야 할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못됐고 때려잡아도 시원찮을 사람들과 하는 것을 온갖 방식의, 그야말로 쪼개기 전법을 통해서 한 부처 사업비의 대부분을 이용해서, 그것도 국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까지 나가서…… 그리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간의 인권과 관련한 개선을 하기 위한 협의 노력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대개 보면 학생들 데리고 독일도 가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서독이 동독을 향해서 이렇게 했나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다면 저 이것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갖고 와 보세요. 위원님들 아마 다 설득되실 거예요. 결국 그걸로 통일이 되었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게 있으면 한번 갖고와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권은 중요한 사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통일부가 하고 있는 상당한 업무 중에서 또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부처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목적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탄생시킨 조직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출판사로 전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데, 출판의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집요한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룬 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래서 저희가……

○한정애 위원 제가 찾아봤더니 동독도 발터 울브리히트, 에리히 호네커, 에리히 호네커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독재자라고도 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재위에 있었습니다, 그 지위에, 통일하기 이전에. 그래도 독일에 수많은 수상들이 재임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공격을 했다는 걸 제가 기록을 못 본 것 같아서요. 보고를 해 주세요, 얘기를 해 주세요, 지

금이라도.

○**통일부차관 김수경** 결국 북한 정권을 통일하려면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싫어할 만한 내용은 발언을 삼가거나 출판물을 삼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출판물을 삼가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 북한인권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0년 이상 조사한 부분들을 출판한 건데, 거기에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좀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어떻게 나아졌더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북한의 나쁜 점만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출판물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애 위원** 글썄요, 늘 결과가 선의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건 잘 아실 거예요. 본인들의 사업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저도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에 굉장히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우리 모든 정책이나 어떤 개입들은 타당성을 봐야 돼요.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북한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청하시고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시고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북한인권 상황이 나아졌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책의 효과성이 어떤 거지요? 결국 모든 정책들은 북한 내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차지호 위원** 아니,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북한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 정책과 예산의 모든 목적, 우리 국회에서는 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잖아요.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적어도 저희는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좀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래서 최근에 유엔 UPR에서도 저희가 낸 보고서를 여러 차례 인용해서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제기했습니다.

○**차지호 위원** 아니, 해외 말고 북한 안의 상황. 계속 모니터링하시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북한에서 북한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에 대한 북한의 외교문서 같은 것들이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차지호 위원** 그게 우리 북한인권 실태조사서에 담겨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최근에 사실은 보도로도 나왔습니다만 그만큼 저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든 국외든 열심히 이야기할수록 북한 당국도, 겉으로야 반발할지 모르겠지만……

○**차지호 위원** 북한 안의 북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이 제출하는……

○**차지호 위원** 한 부처가 이 정도로 집중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효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북한에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는 어렵습니다만……

○**차지호 위원**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거네요. 실질적인 개선에 대한 근거가 없네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환기가 되고 있고 지금 북한이랑 하는 사업의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직접 조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차지호 위원** 아니, 예전에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백신에 접근하는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 문제로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예산을 저희 내부에서 정당화하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권 문제가 얼마나 국제적으로 잘 공론화되고 있고 거기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차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략이 북한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떤 실질적인 개선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 당국이 UPR에서 대응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지호 위원** 그러면 북한 말 그걸 존중해서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국에서 지금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의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국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서 여러 가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아니, 그 전략을 가지고 북한 안에서 인권 상황이 실제로 개선이 됐냐고요, 조금이나마. 그 근거를 좀 달라고 요청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정당화할 거 아닙니까. 이 분야로 계속 가도 된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면 저희가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인권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차지호 위원** 세상에, 그러면 제가 생각……

○**윤후덕 위원** 차관이 질문을 하네.

○**홍기원 위원** 제가 좀……

차관님, 정부조직법상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남북대화를 하고 교류를 할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공감을 확산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문제 제기가 커졌다…… 그런 일요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외교부가 할 일이지.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도 북한인권의 주무부처라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지금 차관이 자꾸 중점을 뒀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사무 관장에 문구가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그 일 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이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통일부가 중점을 두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외교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심리적인 차원에서 혹시나 국정원이 하면 몰라도 통일부가 자꾸 그런 일에 집중해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정부조직법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 내부의 상황과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들과 달리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북한인권 업무도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다시 예결소위로 돌아가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연번을 보면 제가 신규 내역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분단된 지 80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서울대 김병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정말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내역사업 제가 제안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양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2번 연번은 정부안 유지 쪽으로 제가 안을 썼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보면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통일이 뭐 필요하냐 그런 인식들이 팽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확산’ 이 건 좋은데 단, 저는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보는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실패한 콘텐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넷플릭스 포함한 OTT 플랫폼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민간 사업체들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기획하에서 공동 투자를 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조건을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의 3번 연번을 보면 국제통일기반 조성은 정말로 중요하지요. 저도 독일에서 1년 반 살면서 보니까 독일이 통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주변 강대국들이 독일이 통일되는 거를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굉장히 외교를 잘해 가지고 설득들을 잘한 거지요, 물론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시다만. 그래서 이런 국제통일기반 조성하는 국제회의가 정말로 저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감액하는 의견들이 좀 있고, 다 합리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만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지요, ‘If you cannot measure it, you cannot manage it’. 그러니까 회의만 하면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잘 기획을 해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론

조사가, 통일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제 여론이 올라간다는지 그런 측정 지표들을 목표를 세우고 저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부안 유지에는 저는 동의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답변……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융합연구 플랫폼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북한 혹은 통일 관련 분야는 정치외교학을 하는 사람이나 북한학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데 저희는 과학기술이나 보건의료, IT, 바이오 이런 이과 쪽의 연구들과도 연계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통일인식 제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정부에서 만드는 아이템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조회 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과 함께해서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한반도포럼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남북의 통일은 민족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지정학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국들이나 국제적으로 설득하는 여러 작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서 GKF를 좀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또 세계가 주목하는 회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증액이 필요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차관님, 일단 먼저 하나 좀 물어볼게요.

통일부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대화와 협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쨌든 존중하는, 물론 그 내부의 문제도 지적을 하지만 그것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끌어내야 되겠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대화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제가 외통위를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11쪽 보면 ‘국내통일기반 조성’에서 탈북민 토크콘서트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탈북민 토크콘서트가 통일부에서 올해 2월 달에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 내용을 발췌·인용해서 하고 있지요. 맞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 부분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주로 대상은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

고 강연은 통일부장관이 직접 할 때도 있고 통일부에서 통일부 국장이나……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닐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럴 때도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조정식 위원** 제가 내용을 쪽 한번 봤어요. 이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 맞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보입니다.

○**조정식 위원** 맞을 거예요.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제가 쪽 봤는데 그리고 통일부장관이 강연할 때의 토크콘서트 영상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내용도 그렇고 강연 내용도 보면 통일부에서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존중하는 게 전혀 없어요.

이 첫 장의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북한 정권의 실패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한 정권은 다 실패한 정권이고 간부들 뇌물하고 수탈이 횡행하고 있고 죽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아주 온갖 부정적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통일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이끌어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콘서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중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거센 단속 속에서도 꾸준히 유통되는 외부 정보의 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외부 정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유통시켜야 된다, 결국은 북한 내부에 그거를 들여보내야 된다 이런 게 핵심입니다. 맞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외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정식 위원** 김영호 장관이 이 얘기를 하면서 USB 얘기를 아주 강조를 합니다. USB 어떻게 유입돼요, USB 어떻게 유입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여러 경로 더 얘기해 보세요, 파악하고 있는 것.

○**통일부차관 김수경**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조정식 위원** 우리 쪽에서 보내는 게 메인, 핵심이 대북전단 풍선 아니에요? 단체들이 보내는 USB 거기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대북 전단에도 USB가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런 거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그 것이 팩트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조정식 위원** 이게 탈북민 한 6000여 명이 얘기한 북한의 실상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서 강조해서 북한 정권이 실패했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 외부 정보 유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이 다. 그리고 실제로 강연에서는 USB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통일부가 가져야 될 본래의 목적이냐 태도나 취지와는 전혀 어긋나 있어요. 그냥 북한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하에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그래서 이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사업 중지하세요.

○**흥기원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차관님은 USB가 북한에 유통되고 하는 것 팩트라서 저런 자료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요,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그렇기 때문에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도 방조하거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고.

또 비단 저 자료뿐만 아니라 통일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그게 실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딱 보면 안 좋게 느끼고 북한과 통일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또는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세요. 내용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아닌 걸로 얘기하니까 전혀 공감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북한에 전단 날리는 것, 북한에 자유주의 확산하고 또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차라리.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서 아닌 것처럼 얘기하니까 자꾸 엇나가는 것 아니에요.

차관님, 통일 독트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정보접근권 확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런 자료 만들고 그런 내용 넣고 한 것 아니에요? 뭘 팩트라고 얘기하십니까?

제발 통일부가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우리 야당 위원들 이해를 구하든지 국민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든지 하세요. 하는 내용은 다 그 거면서 아닌 것인 양 하는 그게 양두구육과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통일부를 북한인권부로 바꾸든지 북한대결부로 바꾸든지 차라리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계속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참고로 24페이지까지 항목에 대해서는 오전까지 하고요. 좀 이따 정리되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말씀 나눠 주십시오.

○**흥기원 위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님, 제가 하나 확인해 볼게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세부 자료제출을 거부해서 심의가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세부 자료가, 그러니까 사업수행실적이라는 게 회의 내용이나 회의 결과나 이런 것일 텐데 왜 자료제출이 거부가 됐습니까?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각종 회의라 할지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 참석자라 할지 주요 내용, 집행경비 그런 것들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한지 전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최근의 보도를 보면 대

통령께서 골프채를 잡았다고 하는 걸 중요하게 보도까지 하면서 뭔가 새로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도 그런 면에서 보면 통일부가 올해 제출한 예산안 자료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변경이 요구되거나 변경을 검토해야 되거나 하는 대목은 어디 같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신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제출된 예산안이 변동돼야……

○**소위원장 김영배** 전반적으로 외교·안보·통일 정책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저희 생각에는 어쨌든 신행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서 공공외교가 중요해질 것 같고 또 미국 측이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GKF 사업이든 국제적으로 통일외교의 설득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어제 외교부차관은 그 부분은 외교부의 업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저희 소위원회 역할 같아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외교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올린 사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외교부차관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외교부로 배정을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닌 부분은 또 아닌 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배** 제가 좀 더 몇 가지 여쭙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북한인권개선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K 뭐지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몇억인가 들여서 만든 게임 홈페이지 기억하시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소위원장 김영배** 그것 감사하셨습니까? 그 예산을 누가 어떻게 집행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기초로 제가 국정감사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소위원장인 관계로 저한테 아마 와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이걸 좀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일언반구도 없었던 걸로 보면 제 국정감사 때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K 콘텐츠 어찌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액 삭감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수용하시니까 아무 말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K의 공식’은 다른 유튜브 채널이고, 아까 영상 말씀하신 것은……

○**소위원장 김영배** 어쨌든 같은 케니까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그건 유니투어 앱으로 운영……

○**소위원장 김영배** 어쨌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위원장 김영배** 저한테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어제 의원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예.

○소위원장 김영배 제가 정확하게 받고 그걸 다시 점검을 해 볼게요.

김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사실 여기 사업에 국제회의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 수립 이런 용역도 있고 한데 어제 외교부차관이 얘기했을 때 저의 이해 사항은 뭐냐 하면 당연히 북한 비핵화나 통일·외교의 주무 부처는 외교부다. 그렇지만 정부가 하는 어떤 사업이라는 게 한 부처만 딱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어떤 걸 이루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외교부차관의 설명을 제가 이해한 바는 뭐냐 하면 외교부가 하는 사업은 똑같은 국제회의 사업이라도 주로 정부 간 협의라든가 거기에 중점이 놓여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의 사업은 그걸 보충하는 민간 부문이라든가 협업을 균형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중복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외교부하고 분업을 해서 협업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에서도 물론 유사한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로 외교 관계 속에서, 정부 관계 속에서 북한인권이라든가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얘기되는 반면에 저희는 1.5트랙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관이 함께하는……

○김건 위원 1.5트랙이라고 하면 정부가 포함되는 건데요, 1.5트랙인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1.5트랙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민단체라든가 NGO라든가, 그러니까 정부 간의 어떤 관계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KF 같은 경우에는 1.5트랙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민간들끼리의 회의도 운영을 하지만 또 비공개로 1.5트랙도 좀 강화할 예정이어서 외교부하고는 좀 차별화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위원님들……

○김건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저 답변이 아직 이해가 안 가서 통일정책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연 그런 건지.

○통일부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부는 주로 당국 차원에서 교섭·접촉 그런 측면이 주가 된다면 통일부 차원에서 하는 통일공공외교는 주로 민간의 학자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게 중점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할게요.

저는 정리는 아니고 앞에 나온 얘기 중에 약간 정리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도 되는데, 남북대화가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느냐? 지금 마치 우리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니까 재들이 대화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연결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 얼마 전만 봐도, 그러면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것 열심히 안 했는데 왜 대화가 끊어졌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70년부터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건 너무 많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시작해서 ‘장벽 허물어라’, ‘TV조선 문제 있다’, ‘KBS 사회교육방송에 왜 저런 콘텐츠가 나가냐’, 우리에게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걸 요구하고 그걸 안 들어 주면, 군사훈련 중단 안 하면 대화 못 하겠다 등등 지난 5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요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오물풍선 관련해서 ‘우리가 전단 안 날리면 안 올 거다’ 그랬다가 우리 국내 언론들 보고 ‘보도 이것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체제를 비난하고 있다, 우리 존엄을 걸고 들었다, 저것 중단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하면 통일부가 언론에 입 다물어라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내 각종 언론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 ‘그런 건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북대화 되겠어요?’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정확하게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리고 대화는 자기들이 아쉬워서 나오고 아프면 나오는 거지 기분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프게 해 줘야 나올 수도 있어요, 대화는,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북한이 분개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되겠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하는 것은 논의를 다시 해 봐야 될 문제다.

‘우리 정부가 이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게 주장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너무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좀 일방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고. 하여간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든지 토론할 용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일부의 근본적인 역할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에 있어요. 그걸 안 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긍정적인 변화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난 50년이 그걸 보여 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북한하고 대화를 잘하면, 합의서를 잘 만들면 잘될 것 같다는 착각은, 현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될 거라는 얘기는 지난 50년 역사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려고, 보다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리고 장관이 하신 각종 K 뽀 콘서트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론 지난번 결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부대의견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물론 통일부가 잘 유념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 하나로 모으고 남남갈등 줄이고 통일이나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 뜻, 젊은이들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할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그중에 몇 개 부분이 아주 이상하게 가고 있다 해서 ‘그 자체를 다 날려야 되겠다’ 그것은 저도 동의하기는 어렵다. 제대로 방향을 갖고 하라는 말씀은 맞지만 ‘이런 사업 할 바에는 하지 마라’ 그런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차관님께서 지난번 결산 때 지적했던 부대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시고 앞으로 청소년들이든 국민들…… 이번에 8·15 나오면서 민주당 위원들도 얘기하셨잖아요. 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지 않느냐, 왜 지방 안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8·15 독트린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전 지방의 의원들, 국민들 아주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동포도 수렴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차관님, 12페이지의 2번은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을 증액하라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감사하다고 했네요. 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연번 4번,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 이런 제목으로 3억 4000만 원 신규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조사하는 것 보니까 탈북민이 그 조사 대상자지요. 규모가 제법 있어야지 조사를 하게 되지요? 탈북민이 최근 얼마나 남한에 들어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한 200명 이상 들어오고 있다……

○**윤후덕 위원** 200명 정도 그렇게 되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후덕 위원** 그전에는 한 1000명 이렇게도 되고 그랬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서 질문하는 항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조사자에게 당원이나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당원이라는 건 공산당 당원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체크가 돼요, 공산당 당원? 그러니까 탈북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에……

○**통일부차관 김수경** 당원이라고 응답한 자의 비율 말씀이신가요?

○**윤후덕 위원** 예. 몇 명이나 돼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건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2022년에는 2명이었고 2021년에는 5명이었고 2020년에는 18명이었고, 그런데 2013년에는 656명 정도가 공산당원이었어요.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2021년이나 2022년에는 5명, 2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탈북민이 급감되어서 이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지금 2022년까지 조사가 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인원들을 합치면 저희가 한 400명까지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10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고 기억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매년 상황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북한 상황이 어떤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조사를 하지요? 하나원에서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민간으로 복귀해서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하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하나원에서요 하고요 사회에 나가 있는 사람도 조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 대상, 조사 응답을 할 수 있는 샘플이 너무 부족해서 이 사업은 좀 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상단의 북한관련 외국어 서적 배포 신규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

했어요. 신규사업이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외국어라는 게 외국어는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불란서어도 있고 그런데 이것 뭘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가?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선정하는 과정, 프로세스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어라는 게 뭘예요?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불어로 한다는 거예요, 중국어로 한다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영문 서적이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이룰테면 그 나라에 맞는, 그 외국어에 맞는 그런 책을 공판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긴 합니다만 영문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고 또 영문으로 출판된 서적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영문 서적으로 정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공외교를 할 때도 유사입장국뿐만 아니라 비유사입장국과도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할 때 이런 영문 서적을 선정해서 선물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이것은 외국어로 이미 나와 있는 책도 있고 한국말로 된 것을 또 번역을 해서 배포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좀 더 나뉘다가 다음에 하세요.

이게 그사이에 태영호라는 분의 영문판을 만들어서 이걸 배포한다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관심을 가진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것은 사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태영호라는 분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윤후덕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언론이 그런 예를 찾다가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신규사업을 만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외국어로 서적을 배포할 정도로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약간 걱정하셔요.

다른 얘기는 좀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제가 감액 의견을 여러 군데서 드렸는데, 당초에 밝혔던 의견과 거의 대동소이한 취지라서 발언을 삼가고 있었는데 이 내용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어쨌든 해당 사업 분야를 북한인권 실태조사, 정책대안 개발로 확대해서 증액하려는 계획이지만 조사·연구, 개발, 사업 이런 것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북한인권 증진 사업에 참가한 민간단체들이 정치편향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사업 결과도 미흡했는데 그 미흡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 연상될 정도의 전시가 다수 존재했던 것이 이미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었고 SNS 활용하겠다고 목표 세운 15개 단체 중에 제대로 활용한 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5개 단체는 SNS 계정도 개설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신뢰가 가질 않네요. 어쨌든 내역사업 전액 삭감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서면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구두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남북피해자 문제해결 및 인도적 송환업무 지원, 15페이지 5번 항목과 관련해서 제가 2억 2900만 원 삭감을 제시했는데 귀환납북자 지원 용역을 통해 가지고 6명의 생활지원비용 부분을 제외하고 1억 94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수정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차관 답변……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관련해서 SNS나 홍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평가에 반영해서 차년도에는 그 부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오늘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정회를 했다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 나머지 심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페이지 후반부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시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24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심사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보고는 최대한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내역사업인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해서 내내역사업인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1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그리고 정부안 유지 의견 그리고 1억 9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관련해서 3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고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안 유지 의견과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신규 내역사업 신설 관련한 건입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관련해서 신규 내역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관련하여 5억 원 증액 의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한 3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출연금 사업 ‘일자리창출 및 자립촉진’과 ‘일자리성공패키지 지원’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 신설 예산 5억 68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감액된 일자리성공패키지 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원상복구 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8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의료지원 사업 중 피폭 건강검진의 경우 3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대외협력사업 중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의 경우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므로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사업 ‘경영기획’ 중 이사회 및 회의체 운영과 사업성과 및 만족도 평가 관련하여 총 3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를 2024년 1140만 원 대비 70% 삭감하기 위하여 798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금 관련하여 최근 교육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5억 원 증액 의견, 4억 2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사업인 정보화 정보보안 중 하나센터 등 보안운영사업 관련 3억 6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출연금 사업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중 수탁하나센터 운영지원 관련하여 3개소 추가 확보를 위한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사업인 ‘통일미래인재 육성’ 관련 장학금 지원을 통해 차세대 탈북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사업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 공동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전년대와 동일하게 17개소를 지원하기 위한 7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글로벌 통일체험 관련하여 사업 참가자가 15명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사업 효과성을 충분히 거두기 위해 사업 참여인원을 15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통일안보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관련하여 내내역사업 스타강사 발굴 및 활동 지원 사업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사업과 중복되고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사업은 관련 사업이 이미 존재하므로 4억 6700만 원에 대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역사업인 통일교육 원내과정 관련하여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 예산 9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4페이지, 통일체험연수 시설 확충 사업과 글로벌 통일유스캠프 사업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각각 1억 원 증액 및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5페이지 12번, 통일교육자료 개발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북한인권 알리기 콘텐츠 제작은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사업과 통합이 필요하며 유니투어 사업은 AR 기반임에도 VR 콘텐츠 예산을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므로 2억 6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북한인권 알리기

콘텐츠 제작은 북한인권 콘텐츠 개발 사업 및 북한인권 알리기 콘텐츠 제작과 유사한바 1억 1700만 원 감액 또는 585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에듀테크 콘텐츠 특성을 반영하여 유니투어 앱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37페이지, 증액 의견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의 경우 공식 기념식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 및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2억 원 증액 의견 및 1억 원 증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8페이지, 남북경제협력지구 운영·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감액 의견 7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타민간이자수입과 2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의 경우 이자 및 원금 수납액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상황임을 반영하여 기타민간이자수입의 경우 20억 원 감액, 기타민간융자금회수의 경우 15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계획액 1000억 원 중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4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예비채원 금액인 66억 6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1페이지, 기금 예수금입니다.

기금예수금 계획액 1조 2118억 원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756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4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2페이지,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므로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159억 2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쌀 지원의 경우 2010년 이후 지원 실적이 전무하며 지원 규모에 비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미비한바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3페이지, 민생협력 지원입니다.

불투명한 집행 가능성 및 그간의 미비한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1200억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불투명한 집행 가능성 및 그간의 미비한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자료조사 등을 위한 운영비 예산 4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상 편의를 위하여 연번을 매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생활시설 보호 탈북청소년들이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수혜 가능하도록 운영기관 선정 시 만전을 기

하여야 한다.

2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이사장실 외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및 사업비에서의 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

3번,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 2025년 2월 폐지 예정인 러시아 주재 통일안보관을 복원하고 주UN대표부, 주아세안한국대표부, 주베트남대사관, 주선양총영사관 등 주요국에 통일안보관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4번, 통일부는 접경지역 내 말라리아 확산이 증가하고 있는바 남북 간 공동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북한·국제기구·NGO 등과 보건의료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5번,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도록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관계가 큰 충돌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신고절차 및 대책을 마련한다.

6번, 통일부는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실내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비용이 기존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번, 통일부는 성과지표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 삭제에 따른 적정 성과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동 사업의 성과를 제고한다.

8번, 통일부는 이산가족 관련 위탁 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이산가족 문제와 무관한 인사를 초청해 강연을 추진하고 국제협력 활동도 수년간 같은 지역을 방문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24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해서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삭감 의견 주신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원안 유지에 대해서는 수용.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학교 지원 3억 증액, 한미대학생 연수프로그램 운영 1억 9000 증액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26페이지의 연번 9번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10억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연번 9번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5억의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3억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7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가운데 자립 자활 지원 관련해서 3억 1800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8페이지 연번 10번,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피폭 건강검진’ 3억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가운데서 대외협력 사업 중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5000만 원 감액 관련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연번 10번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경영기획 관련해서 37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경상비 관련해서 800만 원 감액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연번 10번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가운데 정착금 지급 관련해서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중에서 '정보화 정보보안' 관련 사항에서 PC 교체 관련해서 3억 6700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1페이지 연번 10번이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가운데 지역사회 정착지원 관련해서 1억 8000 증액 말씀 주신 부분은 약간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 곳에 대해서 각 6000만 원씩 1억 8000의 증액을 말씀 주셨는데 충북하나센터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서 4개를 직영하게 됐기 때문에 총 2.4억, 2억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재단 통일미래인재 육성 관련해서 1억 정도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나재단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관련해서 1억 정도의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2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가운데서 글로벌 통일체험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2억을 증액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연번 11번이고요.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가운데서 현장견학 및 체험연수 관련해서 4억 6700 감액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통일교육 원내과정, 탈북민 전문강사 양성 관련해서 9000만 원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통일체험연수 시설 조성 연구 관련해서 1억 정도의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통일유스캠프 관련해서 4억의 증액 의견 주신 부분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35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북한인권알리기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감액 주신 부분은 저희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1억의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해서 37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관련해서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운영지원 관련해서 1억 5000의 증액 필요성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39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기타민간이자수입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연번 2번, 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관련해서 40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기금예수금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도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41페이지 연번 5번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구호지원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 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이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43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민생협력지원 관련해서 감액 의견 주신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증액과 관련해서 44페이지, 연번 1번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관련해서 증액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부대의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의견 1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생활시설 보호 탈북청소년들이 보호 종료 시에 정착금과 수당 수혜 가능하도록 운영기관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의 입장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재단 이사장은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말고 타 부서 사업비에서의 이사장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성락 위원님께서 주신 통일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주재 통일안보관을 복원하거나 신설을 추진한다고 말씀 주신 부분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성락 위원님께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남북관계가 충돌로 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북관계 주무부처로서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신고 절차 및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검토하는 입장입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재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는 유관기관이나 주요 활동 단체들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윤후덕 위원님께서 주신 북한자료센터 운영 관련해서 실내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비용이 기존 실시설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 주신 부분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홍기원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이산가족 관련……

제가 가진 순서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순서에 따르면 홍기원 위원님께서 통일부가 이산가족 관련 위탁사업을 수행 중인 민간단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하라는 의견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일곱 번째로 윤후덕 위원님께서 통일부는 성과지표 ‘대북·통일정책 고객만족도’를 삭제했기 때문에 적정 성과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참여자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지금까지 정성지표보다는 정량지표에 우선적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라고 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참여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량적인 지표를 저희가 만들고자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참여자수로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제가 하나 좀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김영배** 아직 안 끝났……

○**통일부차관 김수경** 기금 관련해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성락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내에 말라리아 확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 공동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북한·국제기구·NGO 등과 보건의료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제 토의하시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차관님, 28페이지의 한정에 위원님이 감액 내신 것 있잖아요, 피폭 건강검진. 이게 100명 목표로 했는데 23년도 80명, 24년도 40명만 검진했다 이렇게 했는데 부진한 이유가 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이것을 사실상 수행할 수 있는 게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고 싶어도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케파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년도에는 거기에서 사람을 더 충원해서라도 좀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늘려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웅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날짜도 많이 걸리고 본인들이 와서 이렇게 굳이 검진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자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풍계리 지역에서 거주했던 탈북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건강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숫자가 80, 40 됐는데 다시 200을 하니깐 이게 언뜻 보기에 40명…… 점점 줄어들고 더 줄 것 같다는 게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늘려 가지고 이해가 언뜻 안 돼서 제가 한번 여쭙보는 거예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년엔 확 개선될 수 있는 뭔가 동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목표치를 많이 잡은 건지 궁금해서 하나 여쭙봤고.

한 가지는 하나센터 방금 얘기하시다가 충북하나센터……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직영으로……

○김기웅 위원 직영으로 하셨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김기웅 위원 그러면 26개인가요, 총?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인권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스물다섯 군데인데 지금 저희가 공모를 진행해 보니까 중복은 원래 확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듭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에는 민간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일곱 군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25개는 그대로인 거예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31페이지의 윤후덕 위원님이 의견 내셨는데, 세 곳 추가 확보라는 게 뭐예요, 하나센터?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총 세 군데의 하나센터를 재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지금 몇 군데가 또다시…… 민간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세 군데가 들어와서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재단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중복은 그와는 별도로 사후에 일이 발생해서 총 일곱 군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 3개에서 4개가 느는 거예요?

○통일부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예, 그렇습니다.

○김기웅 위원 3개에서 4개가 늘어서 7개가 된다, 숫자는 27개가 된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25개는 그대로인데요.

○김기웅 위원 2개가 더 늘면……

○통일부차관 김수경 25개는 그대로인데 민간이 하던 것 네 군데는 직영을 하게 되면서 사업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개수가 느는 건 아니고요.

○김기웅 위원 글썄, 민간이 안 들어온다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지금 이 용선 위원님도 저번에 한번 지적을 국감 때 하셨고 저희 당의 김기현 위원님도 우려 표시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자꾸 통일부에서 직영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센터 전체 평가한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용역 결과도 그렇고 장단점이 있고, 직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두 분이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법 개정도 하려 했지만 안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민간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건 아닙니다.

민간에 지원자가 없거나 성적이 너무나 나빴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결정을 한 거지 유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우려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무리해서 직영화를 하기보다는 여러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뀐 2개는 예전에 평가하는 데서 하위에 있겠네요? 그러니까 25개 평가점수에서 하위에 있는 것들이 지원도 없고 해 가지고 직영으로 가게 됐다

이런 애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직영으로 부득이하게 선정했습니다.

○**김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홍기원 위원님 하시지요.

○**홍기원 위원** 먼저 질문하기 전에……

강종석 인권인도실장님, 우리 야당 위원들이 대북전단 뭐 질문하면 늘 눈만 껌뻑껌뻑하고 답변도 항상 흐릿하게 해서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통일부에서 1급 실장을 하고 계시나’ 그랬더니 존경하는 김기웅 위원님이 질문하니깐 너무나 똑똑하게, 딱 부러지게 답변하세요. 정말 깊은 유감입니다. 야당 위원들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모르는 듯이, 질문 취지를 이해 못 한 듯이 아주 그렇게 못마땅하게 답변하시더니……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소신껏 얘기하세요.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대북전단 얘기가 나왔더니 표현의 자유 얘기하시는데, 표현의 자유 행위와 실정법이 부딪히면 어떤 게 우선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헌법의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표현의 자유 행위와 실정법이 부딪히면 어떤 게 우선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

○**홍기원 위원** 답을 안 하세요, 못 하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가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아까 위성락 위원님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 얘기 나오니까 표현의 자유 얘기 또 하셨잖아요. 그리고 야당 위원들이 지금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게 항공안전법 또 국제민간항공협약 또 군 공역에서 금지행위에 위반되는 행위로 다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지적을 했고, 그것은 다 맞는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인 것은 통일부에서 하도 강조해서 다 잘 알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해서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또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부딪히면 어떤 게 우선입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경찰 조사 끝에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하고 또 이제 아마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뭘 예단하라 그래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법이나 국제 조약이나 군의 관리 기준에 위반되는데 그 위반과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행위와 충돌하면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재판을 통해서 법을 위반했는지는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홍기원 위원** 아니, 제가 차관님보고 법 판단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표현의 자유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 그랬을 경우에 어느 게 우선하냐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여전히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는지 또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위반되는지, 그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로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지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법원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법상 명확하게 위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행위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무부처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기관이 됐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무것도 안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홍기원 위원** 그러면 하나 좀 물어볼게요.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지금 북에서 날아오는 쓰레기 풍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기원 위원** 쓰레기 풍선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게 하는 확성기 방송도 있고 또 여러 위협도 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에서 계속해서 그런 도발들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북전단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한한테 그런 행위 안 하는데도 북한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구실을 들면서 저희를 도발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대북전단 때문에 그렇다고……

○**홍기원 위원** 반드시인지는 아무도 얘기 안 했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단정할 수는 없고……

○**홍기원 위원** 예, 단정할 수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데 그 행위의 주체는 북한 정권이기 때문에……

○**홍기원 위원** 아무튼 북한에서 주장하기로는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가 자기들이 오물 풍선을 날리는 행위의 배경으로 거론하고 있고 또 풍선 서로 날리는 게, 양쪽이 휴전선에서 스피커 틀고 하고 있고 그거는 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실정법 위반이라고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했고 다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로서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조치를 할 생각이 없다 이게 통일부의 입장인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로서는 유관단체와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의견을 계속 청취할 예정입니다.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유관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의견 청취할 거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조치할 생각이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유관단체와 계속해서 협의하고요.

○**홍기원 위원** 그러니까 국민께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접경지역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홍기원 위원**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께 대북전단 날리는 행위로 인해서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쓰레기 풍선이 온다고 알고 있고 또 그게 발단이 돼서 양 쪽이 휴전선에서 대형 스피커, 확성기 틀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헌법의 자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려고 한다. 다만 그사이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 이게 공식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그거를 바꾸라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꾸 아닌 것처럼 얘기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하나 좀 코멘트할 게 있는데요.

32페이지의 글로벌 통일체험 그래 가지고 탈북청년들하고 2030세대가 폴란드하고 독일 방문해서 공산주의 실체 체험하고 이를 통해서 통일 필요성을 체감하고 의식을 고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일부의 공식 설명 맞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공산주의 부분은 좀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홍기원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는 ‘폴란드의 국립기억원, 공산주의 박물관, 독일 슈타지 형무소, 독재청산재단, 할레경제연구소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체제 전환국이나 통일을 경험했던 나라에 가서……

○**홍기원 위원** 탈북청년들은 공산주의 체제 북한이 싫어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 보고 독일, 폴란드 가서 공산주의 때 그 만행들 체험시키고 그래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남한 학생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통일을 경험한 나라는 일단 극소수에 불과하고 체제 전환을 경험한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홍기원 위원** 아니, 탈북청년들한테 그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억의 예산을 써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탈북청년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가는 거고요.

○**홍기원 위원** 아니, 탈북청년들이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는 싫어요’, 공산주의 몰라서 여기를 구경시키러 보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의 현장에 가서 통일의 미래를 같이 이야기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보는 게 포로 수용소, 공산주의 박물관, 독재청산재단, 형무소 그 체험시키려고 몇억 들여서 탈북청년들하고 2030 청년들을 보낸다고요? 통일부가 그제 할 일입니까?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방문……

○**홍기원 위원** 하나 또 묻겠습니다.

통일부에서 DMZ 통일걷기 행사 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홍기원 위원** 2022년에도 하고 또 2023년에도 했지요. 그런 좋은 사업은 없애고 결국 형무소나 수용소나 이런 데 구경시켜서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는 게 통일부가 할 일입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지적사항도……

○**홍기원 위원** DMZ 통일걷기 이런 사업은 왜 없었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방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른 곳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향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좀 더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는 곳으로 방문지를 조정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DMZ 통일걷기 사업은 왜 없었어요? 통일부가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위원님, 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DMZ 통일걷기 사업은 올해 6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건 맞습니다. 다만 DMZ 통일걷기보다 훨씬 포괄적인 통일안보 현장견학이라는 훨씬 더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원 위원** 그래서 올해 DMZ 통일걷기 사업 예산 받아 놓고도 실행을 안 했어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아닙니다,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안 한 걸로 돼 있던데요?

○**국립통일교육원기획연수부장 추석용** 아닙니다. 저희가 10월인가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도 하기 전에 남북 간의 긴장이 격화돼서 연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예정대로 했습니다.

○**홍기원 위원** 아니, 통일부라면 DMZ 통일걷기 사업 이런 거를 잘 발전시켜서 해야지 어떻게 나치 치하의 그런 수용소 보여주면서 공산주의 체험해 가지고 통일 의식을 고취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방문지를 변경한다고요? 그런 데 구경시켜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만들고는 지적받으니까 방문지를 변경해서 한다고요? 기본 사업 취지에 안 맞지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짧게만…… 차관님 답변하실 때 아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부처 관계자나 장차관님 또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흔히 쓰는 용어도 있잖아요. ‘가정적 답변에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그런 말로 또는 사과 대신에 ‘유감이다’ 이런 상투적으로 쓰는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거는 그런 사용의 정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살인을 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다려보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고 난 뒤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해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 있고 통일부의 유권해석이 그와 상치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행위 당사자가 위반행위 자체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미 시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서 흔히 장관님이 하는 답변, 부처가 하는 답변의 통상의

통례에도 해당되지 않는 답변이에요.

그냥 매뉴얼대로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통일부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명백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 아니라면 홍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된 조치와 관련해서는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한 것처럼 민간단체에도 안내를 하고 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계도조치 등을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래서 법 위반, 그러니까 2kg 이상의 물건을 부양했을 때 위법……

○**이재정 위원** 2kg가 되냐 안 되냐에 다툼이 있으니까 그걸 기다려보겠다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러니까 위법하다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지는 관련 단체들과……

○**이재정 위원** 그 얘기 여러 번 들었고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뭔지……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그것을 무조건 항공안전법에 위반되니까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라는 아까의 발언은 그러면 뭐 때문에 하신 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세한 조사 결과를 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

○**이재정 위원** 본인이 다투고 있어요? 2kg가 아니라 1.9kg라고 다투고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안 했다, 나 닮은 사람이다, 다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이재정 위원** 자, 음주운전 하면 처벌받아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음주하고 관련된 수치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주운전 하면 안 된다고 계도 조치하세요’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하면 황당하지요? 지금 차관님 답변이 그런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관련 단체와 얘기를 통해서 알고 있구나, 인지하고 있구나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단체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재정 위원** 아니, 법원의 판단을 왜 기다리냐고.

○**홍기원 위원** 알면서도 왜 조치 안 하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애들하고 질의 응답하시나? 해도 너무하네.

○**윤후덕 위원** 저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차관님, 26페이지의 9번입니다, 봐 주세요.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여기에 보면 증액을 해 달라고 내가 3개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개선 사업 10억 그리고 또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 5억 그리고 법률서비스 지원 3억 이렇게 제가 의견을 냈는데 존경하는 차관님이 수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30페이지에 역시 윤후덕 위원이 북한이탈민에 대한 교육지원금 5억을 증액 하자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밑에도 또 PC를 교체하는 거, 3억 6700만 원 수용한다 그런 말씀을 해줬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리고 31페이지도 그렇고 쪽 해서, 37페이지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예산이에요. 평화경제특구법의 운영지원에 관해서 지금 편성된 게, 이게 조금 부족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차관께서 수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거를 다 합치면 얼마예요? 증액에 대해서 수용 가능하다고 합산한 게 윤후덕 위원에 대한 것만 얼마를 수용한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계산을 해 봐야……

○윤후덕 위원 그냥 말로 수용한 거예요 아니면 신념을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하고 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 주신 부분은 다 타당한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진다면……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아니, 그 금액이 다 합치면 32억 9700만 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예산은 총액예산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각 부처가 자기가 필요한 그 총액을 미리 정하고 그걸 가지고 부처가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가지고 배분하고 사업을 결정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한테 32억을 증액을 할 수 있다라고 수용을 했으면 그만큼의 금액을 어디선가 감액해야 돼요. 그런데 감액을 해야 된다고 내가 주장을 한 거나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감액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차관은 지금 예산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수용 가능한 것도 이행할 수 있는 거를 수용을 해 줘야지 ‘그냥 좋은 얘기니까 수용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차관이 감액할 거에 대한 목표를 좀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에. 그게 얼마나 감액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에서는?

차관, 얼마나 감액할 수 있어요? 어디선가 32억을 감액시켜야 나한테, 윤후덕 위원의 증액을 수용한다고 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주신 증액의 의견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감액을 어떤 전제로, 그러니까 ‘이것은 깎을 수 있으니까 이견 내려 주세요’라든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윤후덕 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거는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감액을 하면 감액한 그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 심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차관이 그런 개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이 심사를 받으면 이렇게 계속 결론이 안 나요. 사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조금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이건 조금 증액해 주십시오’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돼요, 차관이.

○**통일부차관 김수경**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면 증액도 필요 없으니까 감액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예산 심사를 할 때는 냉혹하게 예산을 심사해야 돼요. 이게 아닌 얘기로 인심을 부리고 ‘수용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깐요. 실현 가능성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요. 난 또 다 수용해 주는 줄 알아서 기분 좋았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가 물론 32억을 더 증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하더라도 기재부의 한도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이만큼을 받으면 이만큼을 내 줘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꼭 얘기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닌 얘기로 이게 놀부 배짱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 것은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런 얘기, 그런 심리예요.

제대로 심사하세요. 그래서 감액할 것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임하세요. 그런데 감액은 하나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증액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그다음 한정에 위원님.

○**한정애 위원** 차관님, 표현의 자유 중요하고요. 대북전단을 날릴 수 있어요. 그런데 P-518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니깐 그 안에서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북전단은 날릴 수 있는데 김포공항 안에 가서 날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공항 안에서 날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구분해서 날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법하지 않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인 겁니다.

지금 P-518은 휴전선 지역이고요. 여기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비행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구역이고요. 거기 가서 날리니까 문제인 것이지요.

그게 합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거기서는 날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지역에 있는 분들은 드론 하나 날릴 때도 국방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가 안 나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탈북단체들은 왜 안 지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P-518 지역을 들어가지 말고 벗어나서 날리면 돼요. 누가 거기서 날리는 거를, 표현의 자유를 막습니까? 아무도 안 막습니다. 파주·강화·연천·포천 이런 데서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아시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27쪽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신설하신다고 5억 68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소상공인들이 하루에도 몇만 명씩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탈북민들에게 창업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거지요. 제일 잘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여기의 일자리성공패키지사업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김건 위원, 김영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지요. 왜냐하면 탈북민의 경우에는 5년까지만 취업계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하고 통일부가 그야말로 협의를 하면 됩니다. 탈북민들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취업계층으로 인정하는 것을 가능하면 횡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지침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국내에서 오랫동안 창업을 했던 사람들도 판판이 나가떨어지는데 창업을 양산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 예산은 좀 깎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성공패키지 예산을 올리자고 하는 거고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통일부차관 김수경** 사실 저희가 창업을 유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장에서는 창업을 원하는 탈북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요에 맞게, 창업 수요가 워낙 많아 가지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을 증액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딘가에서는 좀 줄여야 되다 보니 일자리성공패키지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그것을 다시 창업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확장해 본 것이고요.

사실 탈북민이 창업한 회사의 생존율을 조사해 보면, 하나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창업 생존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탈북민들의 창업이, 물론 창업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탈북민들의 창업 수요도 많고 또 탈북민들이 창업한 회사들이 그렇게 일반 국민들의 창업보다 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늘려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정애 위원** 창업을 권장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도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한정애 위원** 그리고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열아홉 분이 고독사를 했어요, 그것도 다 50대 미만 되는 사람이. 이 뒤에 보니까 청년들 15명 데리고 가 가지고 2억씩 써서 필요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9명이 고독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서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 보여진다고 하면 이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고용지원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북민의 경우에 고용되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지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말씀드리잖아요. 탈북민은 5년까지만 취업패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벗어나고 나면 어쨌든 노동부로부터 상담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창업의 길로 가는 것이지요.

많이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자영업자가 그 경쟁에서 제대로 살아남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보다는 좀 높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소상공인 시장에서, 자영업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고독사하는 것이지요.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탈북민들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하는 통일부가 ‘다른 그냥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이 저는 그게 맞는 답인가 싶어요.

사전을 넘어서 한국으로 온, 대한민국을 찾아서 온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상으로는 탈북민 창업의 5년 생존율이 한 49.6%로 나오고 일반 국민이 한 34.3%로 나와서 높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원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른 예산을 빼서 일자리성공패키지 예산을 좀 늘리시고, 이걸 고용노동부하고 협의하셔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성패로 지원을 해 주는 기한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리시든지 아니면 아예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그걸 협의를 하십시오. 부처 간에 이런 건 좀 협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정식 위원** 몇 가지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관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는 이미 사실상 우위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이제, 이번에 해외 국감도 다니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과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저도 더 실감을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북한이나 공산체제와의 체제 경쟁에서는 저는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서 보면 도리어 통일부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아까 방금 전에 윤후덕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몇 분 얘기를 하셨는데 통일부가 사업을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해서 제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거는 저는 통일부가 좀 더 역점을 두고 예산도 지원하고 증액하는 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도 그걸 국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데 예산을 증액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지금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와 교류를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데 자꾸 돈을 쓰겠다고 하면서 신규사업 발굴하고 저는 그거는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전 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한반도가 갈수록 더 대결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일차적인 원인은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또 자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관리해야 되는데, 통일부의 역할은 그런 거지요. 국방부가 해야 될 건 또 따로 역할이 있는 거고 외교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통일부가 도리어 그런 걸 조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오늘도 대북전단 애

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리어 통일부가 방조하거나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듯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 좀 지적을 할게요.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2쪽의 글로벌 통일체험, 신규사업이지요? 저는 이것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목도 안 맞아요. 글로벌 통일체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딱 이 사업 봤을 때 첫 번째로 이건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때 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가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폴란드의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가 다, 이 두 국가 모두 이미 체제가 전환됐고 통일이 이루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현장 보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왜 과거로 회귀합니까?

그리고 왜 이런 데다가 신규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써요? 차라리 이 사업 탈북민에 쓰게 하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발굴하든가. 그래서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이거 말 그대로 30년, 40년 전의 반공교육 같아요. 통일부가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7쪽에 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을 공관에 배포를 하겠다 그래요. 백 군데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관에서 ‘도대체 이 서적 왜 보내나?’ 그럴 것 같아요.

왜 통일부가 돈 들여서 공관에다가 영문서적을 갖다 이렇게 보냅니까, 누가 보라고? 그리고 보니까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다. 뭔가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 더 알리고 선전하겠다 해 가지고 억지로 막 신규사업들을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사업이 22쪽에 보면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올해 24년도에 18억가량이었는데 내년도에 11억을 증액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29억 6000만 원, 그래서 그 11억을 증액해서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왔는데 이거 다시 돌리십시오.

국감 때 제일 많이 지적된 것 중의 하나가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거나 또는 그 단체 임원에…… 대북전단 실제 살포 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있거나, 행사 때 대북전단 살포를 한 사람을 표창을 주기도 하고.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자그마치 11억씩이나 증액을 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고 더 고취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전액 다 삭감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글로벌 통일체험 같은 경우에 물론 방문하는 위치 같은 것들이 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통일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통일 이후에 그 사회는 어떻게 되며 그 사회가 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독 출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혹시라도 독일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 서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엄정하게 선정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어떤 정부 의견을 전달하는 것보다 비유사업장국들에게는 이런 책들을 선물함으로써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리고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해 보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고요.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활동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북전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모든 단체들이 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만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철수 위원 24페이지 연번 9번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인데 저는 정부안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증액이나 감액은 아닌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로 다시 탈북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에, 그렇지 않아도 2024년보다는 좀 더 증가했으니까 이것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페이지 연번 10번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증액을 주장했던 이유가 최근에 교육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서 그 자녀까지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원 대상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4억 2800만 원 정도가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34페이지에 연번 11번 사업이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인데요, 이것은 사실 수도권에 있다 보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게 보면 통일체험연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못 가지고 피해를 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획에 제대로 반영돼야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골고루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견 낸 것 중에 중요한 것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증액 의견인데요. 37페이지의 연번 1번에서 보면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액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제가 문제를 느끼는 게 홍보입니다. 사업을 충실히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하는 것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나 홍보 예산 부족이거나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말로 제대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연번 6번입니다.

저는 이것은 감액 의견입니다. 사실 구호지원이 좋지요. 그런데 실제로 쌀 지원을 보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59억 2300만 원이 증액된 805억 67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사실 차관해서도 아시다시피 쌀 지원이 2010년 이후에 지난 십몇 년 동안 지원 실적이 거의 전무한데 오히려 쌀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 의견을 냈고.

또 비슷한 생각으로 43페이지 연번 7번의 민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이 인도

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불투명한 집행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 우리가 이것을 증액 편성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이산가족의 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홍보에 훨씬 더 중점을 뒀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증액이나 혹은 정부안 유지 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말씀 주신 구호지원과 민생협력 지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구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쌀 지원 양은 2024년도에는 8.7만t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지만 내년에는 7.5만t으로 한 1.2만t 정도를 줄였습니다. 다만 쌀 가격이 올라가면서 본의 아니게 액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구호지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놔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바로 시행이 가능해야 돼서 감액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민생협력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도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보건의료 이런 쪽에 좀 더 증액을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급한 것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책정을 해 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조금 더 하고요. 조금 이따가 어느 정도 하면 쉬었다가, 조정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평통 게 남아 있기는 합시다만 중간에 잠시 후에 좀 쉴 예정인데, 마무리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마무리예요, 벌써?

○**소위원장 김영배** 아니요, 말씀하세요. 정회지요, 그러니까.

○**윤후덕 위원** 쉬고 나서 다시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윤후덕 위원** 그러면 쉬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차관님, 39페이지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에는 정부의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서 예수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정부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예요?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리고 공공자금 관리기금—공자금이라고 하지요—거기에 한 1조 2000억 정도 예수금을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출연금 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알고 계세요? 이것 1000억을 어떻게 쓰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중의 933억 원은 경수로 계정 및 남북협력 계정 예수이자 상환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67억 원 정도가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 예비재원입니다.

○**윤후덕 위원** 정확하지는 않네요. 1000억 중에서…… 경수로라고 알고 있지요? 1999년에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북핵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내년 예산, 공자금에서 1조 2000억 정도를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돼요, 공자금에 대해서. 그게 경수로 계정에 691억 원 지출할 예정으로 편성한 거고 그리고 남북협력을 하는 계정에서 242억 원이

편성돼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중에서 경수로 계정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691억 원 이것은 그대로 확보해서 반환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남북협력 계정의 242억 원은 몇 년 동안 남북 간의 협력을, 사업 하지 않아서 공자금으로부터 예수를 안 받아서 이자를 상환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예산을,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를 상환하는 242억 원을 그대로 감액을 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제가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에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미 8월 말 현재 170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2000억이 넘어가는 여유자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242억 원의 남북협력 계정의 이자 상환은 실제 일어나지 않으니깐 돈은 받아 내고 감액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통일부가 증액할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242억을 감액합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남북관계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협력기금을 잡아 놓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확보해 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자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남북협력의 의지가 없다라는 모습으로 비치 수도 있을뿐더러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급히 투입돼야 되는 돈이고 예년에 비해서도, 지금 규모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윤후덕 위원** 그런 식의 답변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8월 말까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이 이미 1768억 원의 안정적인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염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만큼 남북협력 사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것 삭감합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 증액할 수 있어요.

○**한정애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기웅 위원** 저 한마디 더……

○**소위원장 김영배** 예, 김기웅 위원님.

○**김기웅 위원** 아까 글로벌 통일체험 관련해서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경험으로 봐도 통일미래세대인 젊은이들이 탈북청소년,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이해도 깊어지고 또 대화가 활기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대학생들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는 탈북청소년들이 같이 끼어서 하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하게 되고 또 대화가 상당히 열기 있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면서 탈북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간에 많은 대화의 장, 소통의 장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 사업도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데요.

아까 지적하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태면 저도 독일 가 봤습니다만 베를린 장벽이라든가 혹은 구동독 지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라든가 사실상 통일

의 비용 못지않은 많은 편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통일미래세대한테 통일의 어떤 긍정적 측면을 보여 주는 것도 발굴…… 실제로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하나 드려 보고요. 참고 하시면 좋겠고.

아까 들으면서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전단 날리는 것 관련해서 답변을 하 시는데 약간 소통의…… 정리를 내가 해 드리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차관님께서 예시 하시면서 단체한테 뭘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 느껴 보니까 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라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날리는 것을 막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 막아라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법을 지켜라라는 얘기는 수용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누구나 실정법을 지키라는데. 그리고 법이 항공안전법도 있지만 고압가스 안전법도 있고 집시법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많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통일부 직원들이 파주에 나가서, 연천에 나가서 고압가스 안전자격 있는 사람이 가스를 넣고 있는지를 다 확인해 가지고 위반하면 고 발해라 이런 뜻은 아니시잖아요.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들이 있지요. 국토부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을 누구나 인지해서 위반된 게 있으면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자체든 간에. 그것은 소관 업무 부처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원하시는 것은, 아까 사법부 판단이라는 것도 그 부분에 특정인이 특정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는 당연히 결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라, 고압가스 안전법이건 무슨 법이건 우리 국내 실정법이 있으면 이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정법을 잘 준수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얘기하시는 것도 그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나서서 ‘당신들 절대 날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막으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열몇 개가 관련된 법들이 있는데 이런 법들이 있으니 법을 잘 인지하시고 법을 잘 준수하시고 그 테두리 내에서 하세요’라고 말해 달라는 뜻이라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차관님 입장에서 보면.

○통일부차관 김수경 그런데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 다라고 충분히 말해 줄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아니라 준수하라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인지한다는 것은 곧 이러이러한 법을 주의하라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김기웅 위원 그 얘기도 해 준다면 모두가 만족하실 텐데 당연히 법을 인지해야 되고 ‘법을 지키세요’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지하지 않았다면 이러이러한 법들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법이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부분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원하시는 것은 통일부가 하라,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것은 물론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옳지도 않지요. 단체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하지 마라를 마음대로 할 수…… 그런데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 법에 위반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경찰이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어디 실정법에서 국토부든 어떤 주무부처도 있고 집시법도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있고 수없이 많은 관련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딱 하나 지금 문제가 통일부에서 ‘법을 잘 지키세요’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처나 이런 데 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조하고 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시면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거기까지 안 가면서 지금 계속 오해라고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홍기원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제일 많이 제기한 사람이니까 제 의도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거기에 조금 더 더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탈북민들이 그런 대북전단 풍선 날리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책임 있는 부처라면 지금 국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 위반이고 또 이로 인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돼 가고 또 북한에서 대응 조치하면서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해가 되고 걱정이 되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알려 주고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저는 통일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많이 긴장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 등등의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태도의 말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북전단 날리는 게 북한에서 오물풍선 또는 양쪽이 대형 스피커 틀어 가지고 서로 간에 힘들게 하는 그것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가 먼저 공감할 하는지, 그렇게 이해하는지, 그게 중요하냐 물어보는 건데 지금 차관님이나 장관님 또는 실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아닌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렇다고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그분들도 대북전단 풍선 안 왔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체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날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고 또 통일부도 기본 입장이 대북전단 계속 날리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이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소위원장 김영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를 좀 할게요.

아까 안 그래도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이 헌법하고 법률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물어보셨는데 헌법적 여러 가치가 있잖아요. 헌법 가치에도 여러 가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헌법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결국 법률로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 현행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꾸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게 맞잖아요. 현행법을 위반하는 게 헌법을 지키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헌법을 어기는 길인 거지요. 실정법 위반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공직자가 헌법적 가치를 운운하면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해태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민이 실정법 위반 행위를 버 것이 하도록 방조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식과 답변은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이 국회의 공식적인 답변으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철회돼야 되는 답변입니다. 그게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는데 재난 주무부처인 행안부에서 재난경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업을 한다고 나가는 일이 있었을 때 해수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정해진 직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어민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면 해당 공직자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본인께서 해수부장관이면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법이 아니고 이런 소위 이야기하는 일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그런 행정책임자들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지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가 있고?

그런데 분명하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관련 기관,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차관의 답변 내용도 그렇지만 태도도 지난번 국정감사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이것은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시 10분인데요. 2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반부터 속개를 하고요. 속개하면 평통을 먼저 다룬 다음에 통일부 예산심사에 대해서 추가로 좀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하고요. 이후에 어제 외교부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동승철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통일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사우 전문위원입니다.

앞선 심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심사 시간 확보를 위하여 전문위원 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감액 의견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자문회의 운영 관련하여 내역사업인 정책건의·법정위원회 운영 중 내내역사업인 정책건의 보고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해외 출범회의의 내내역사업인 국내 출범회의 관련 6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증액 의견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여성위원 역량 지원 관련 6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 지역협의회 운영입니다.

내역사업 협의회 운영비 관련 7억 7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역통일활동 지원 중 내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 관련 18억 7800만 원 증액 의견과 7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 부대의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연번을 부여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2025년 신규 반영한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거주 편차 등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한다.

2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 추진 시 통일부 및 행정안전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하도록 한다.

3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자문회의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에 근거하여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변경된 여론분석 업무를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복원하고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의 발간과 배포에 치중된 예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여론 수렴과 심층 분석을 위한 예산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한다.

4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 및 청년 자문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3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증액 및 감액 의견 1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분과위원회가 21기에는 그동안에 10개 분과위

를 운영하다가 9개 분과위원회로 좀 효율성, 그러니까 유사 직능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시다만 그와 관련해서 1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9월 1일 날 22기 출범을 하게 됩니다. 9월 1일부터 출범하게 되는 22기에는 다시 10개 직능으로 세분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심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국내·해외 출범회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3200만 원 증액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여비하고 임차료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안 돼서 다른 예산을 이용·전용 통해서 충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비, 임차료, 용역비 그다음에 간부위원들도 의장님과 임명장 수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의 출석료를 제고하기 위해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현실화하는 예산으로 이렇게 증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규모가 6억 3200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5쪽의 청년·여성 위원 역량 지원입니다.

국정감사와 그다음에 외통위·예결위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요.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위촉도 늘리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국내·해외 이렇게 6400만 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협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국내 지역 운영비가 17년부터 23년까지 7년 동안 동결이 돼서 그동안에 협의회당 1년에 54만 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에서 일용인부임을 좀 쓸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예산을 현실화하는 예산으로 협의회당 79만 원 정도는 운영비를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산입니다. 7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추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28개 지역협의회에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이 이제 3개년 계획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에서 탈북민들이 이웃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멘토링 사업을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와 행안부와 협업을 통하고 또 저희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으로 특화된 사업들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8억 7800만 원 증액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대의견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넘버링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이탈주민은 지역과 농촌 또 직업군에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협의회와 함께 그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통일부와 행안부와 협업할 것은 협업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좀 유연성 있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론분석과 관련된 여론분석 보고서 이름을 지금은 ‘통일 여론분석 보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평화통일 여론분석 보고서’로 복원을 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성이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그다음에 청년·여성 위원 비율을 좀 확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행령에는 여성 자문위원 40%, 청년 자문위원 30%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내년 9월 1일에 출범하는 22기에는 그 시행령에 맞게 최대한 청년과 여성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말씀하시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3페이지의 연번 1번은 제가 한 건데 이것 철회하겠습니다. 감액하지 않습니다.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4페이지 연번 1번인데요.

지금 당연히 모든 구성원들이 임명된 이후에 해외출범회의도 하고 국내출범회의도 하는데, 저희도 요즘 출장 가 보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항공 운임비용이나 임차료나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모두 다 임명이 되고 숫자가 정해진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었고요.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6페이지 연번 2번은 협의회 운영비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감액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제대로 현실화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에서 증액 의견을 냈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연번 3번, 지역협의회 활동추진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통일공감 사업을 제대로 좀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한정애 위원 감액을 하려고 하는 것이나 증액 얘기는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 공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평통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국내에 있는 228개 시군구 지역협의회에 탈북민 자문위원을 최소 한 명씩 위촉해서 지역협의회하고 탈북민 공동체가 연결을 잘할 수 있게 하자고 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시군구 지역협의회에서 흔히 말하는 자문위원 찬조금, 협력금 이런 방식으로 돈을 걷는 게 있는데, 이게 탈북민의 입장에서 보면 감당하기 쉬운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도 좀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탈북민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로 다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특별히 지역협의회에 청년 또는 탈북민 출신에 대한 협찬이나 회비를 걷거나 할 때 조금 특정한 사항들을 배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을 좀 내부적으로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수가 출발하면 간부 위원, 협의회장, 부의장 이런 분들 워크숍을 하는데요. 그때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회장님과 부의장들께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건 정당 얘기이기는 합니까만 정당들도 청년에게는 당비를 적게 받는, 깎아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조금 해서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김영배**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동승철 사무차장님과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국장님 그리고 특별히 위원지원국장님은 지회를 관리하시는 거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경험을 각 지회 활동하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셔서 각별하게, 아마 다른 부처들하고는 다르게……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증액 의견에 동의하신 이유도 어떤 이유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위원지원국장 송순철**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래서 특별히 좀…… 저희 지역에서도 각별하게 또 하시던데 하역튼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듣고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감액 의견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 것 같고 혹시 나머지 조금 더 정리할 사항이 있는지, 전문위원이 정리해 주시면 그걸로……

○**전문위원 김사우** 7페이지 금액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위의 18억 7800만 원으로 하실지 아래 7억……

○**소위원장 김영배** 아, 7억으로 할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정애 위원** 예결위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원장 김영배**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쪽으로 결정하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우** 증액 4건에 총금액은 33억 5100만 원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지금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그리고 방금 전문위원 말씀이 있었습시다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된 자구와 계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 김사우 소위원장님, 부대의견 멘트를 주셔야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부대의견에 대해서 4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대의견도 아까……

○전문위원 김사우 예, 수용한다고……

○소위원장 김영배 채택하는 것을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통일부 입장해 주십시오.

아까 한번 일별했습니다만 통일부 관련해서 혹시 정리할 수 있는지 잠깐 논의를 한 다음에 정리가 잘 안 되면 또 잠깐 정회했다가, 아까 외교부 예산도 최종 입장 정리가 필요하고 해서 통일부 잠깐 얘기한 다음에 정회했다가 최소 오늘 6시 반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조정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경 차관님, 아까 위원님들의 여러 제기가 있었는데요. 잠깐 정회하는 사이에 답변이 물론 있었습시다만, 감액 의견들을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개별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통일부가 그 의견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정리된 내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나 혹은 추가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아까 전에는 짧게 설명하느라고 수용 여부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서 나중에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정부 원안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증액에 대해서도 다 수용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더 논의를……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2023년도의 물가상승률이 3.6%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예산이 3.6%가 늘어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통일부 예산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 일반회계가 50억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정부안을 만들 때 상당히 감액한 상황인데……

○윤후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켜야 한다라는 거네요?

○김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182억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부 부처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통일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적극시켜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더 이상 토론하기보다는 이제 입장 전달은 서로 간에 있었기 때문에 간사 간에 조정 작업을 좀 거치고, 부처하고도 조금 더 추가로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일단 지금 5시인데요. 5시 반을 기준으로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협상이 아니라 제가 다른 한 가지만 마무리……

○소위원장 김영배 말씀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차관님, 통일부에서 증액은 다 수용하는데 감액은 한 푼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셨는데,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부 원안을 하나도 감액 없이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국회 예결위에서도 전체 총액은 유지를 하되 감액을 통해 증액분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감액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가져온 세입·세출 예산 개요를 쭉 보면 세부사업별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전체 42개에 걸쳐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보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대목들이 있어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보면 정부에서 대부분 감액들이 많이 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도 나왔던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것은 대부분 감액돼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은 감액폭이 12% 또 남북교류협력 기반 구축은 20%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증액 폭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증액이 114.7%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다른 데 감액들이 다 10%, 20%씩 돼 있는데 이렇게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만 두드러지게, 오직 이것만 그냥 대폭 114%, 115%가 증액됐는데 이걸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어떻게 나중에 증액분과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을 해서 증액할 것, 감액할 것들을 좀 진짜 고심하셔서 짜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또 여야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그리고 가급적 최대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안들을 한번 좀 마련해 보세요. 그래야지 증액은 다 수용하고 감액을 하나도 못하겠다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그렇게 하는 거 없어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정착민이 몇 명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500명 정도로 설정했던 것을 좀 줄여서 한 380명 정도로 예측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줄어들었지 실제로 저희가 정착금을 지원하는 규모를 줄인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인권 관련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관련된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한 104억 정도를 이번 예산을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땅 부지 매입비가 절반 정도 지불이 된 상태고 나머지 부지 매입비를 내고 공사를 하려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과도하게 북한인권만 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내용들을 과도하게 줄인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부지 매입비 빼고는 그게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6억 정도, 그러니까 60억 정도는 인권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돈이 고요. 나머지 6억 정도가 증액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그러면 총 한 십몇 % 정도 증액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다른 데 깎인 거에 비하면 많이 는 건 맞네.

어쨌든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액수 자체라기보다는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단 좀 정회를 할 테니까 빨리 관련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여러 의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결론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산회하고 내일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지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건 김기웅 김영배 김태호 안철수 윤상현 윤후덕 이재정 조정식 차지호
한정애 홍기원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사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정책실장 김병대

인권인도실장 강종석

정보분석국장 김상국

통일협력국장 황태희

국립통일교육원

기획연수부장 추석용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김선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동승철

자문건의국장 박학민

위원지원국장 송순철